

'이재명 방탄' 논란 당한 80조 개정

민주, 의총서 찬반 갈려

최근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찬반으로 갈렸다.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기존 당헌 80조가 과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거 개정 사례로 국민에 의문받았던 사례, 개정 절차에서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반대 및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최근 헌안에 대한 논의와 의원들의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헌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한 내용이 단연 주목 받았다.

뉴스1 취재 결과에 따르면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 뜻을 보였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총회에서도 그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잘 해결하겠다고 했다. 전 기본적으로 우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커져 잘 해결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 반대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었냐는 질문에 "8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분들 말씀은 제가 전하기 부담스럽고, 전 총회까지 오면서 이 부분을 공문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괜히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총회 중 속보가 떠서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비대위 논의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지금의 당헌당규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정치 탄압의 경우 우리가 그걸 수용할 이유가 없지 않나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을 전당대회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용진·전해철·조응천·설훈 의원 등 반대 입장

양이원영·임종성 의원 등은 찬성 뜻 밝혀

전준위, 개정 의결...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시 직무 정지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조항에 손대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 부담을 갖게 되고 국민의 눈높이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인사청문회 기준을 변경할 때, 위생장단을 만들 때, 재보궐 선거 후보 내지 않는다는 개정을 해서 됐을 때, 다 그때 그때 이유는 있었다. 그런데 우리들만의 논리와 이유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고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도 앞서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총회에서 이번 개정 논의가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비치고, 당이 너무 속고의 시간을 안 가졌다 등의 논거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었다. (당헌 80조 개정) 찬

파하다고"라며 "박용진 의원이 발언할 때 박수가 좀 있었고 그거밖에 없었다. 전준위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냥 통과시킬 것 같고 이후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을 했다고 한 설훈 의원 역시 "당헌 80조 고치지 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최고위원 후보 고민정, 윤영찬 의원은 이날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사안에 대한 죽담을 피했다.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개정 이슈에 대해 "저는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것 아니냐'라면서 너무 도덕주의 정치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고 본다. 개정할 필요는 있다. 정치적 프레임이 씌우면 누구든 기소될 수 있다. 기소 당하고 무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현 당헌 상으로) 무죄 받고 난 다음에 복구가 안 되지 않나. 범죄 사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당직을 내려놓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박용진 후보가 발언할 당시 의원들 분위기가 싸했다고 설명하며 "실제 범죄가 없는데도 프레임에 의해 기소됐다면 억울하지 않나. 그런 경우 많았고, 지나고 나서 무죄 판결이 내려도 일단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다. 그런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또 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이 사안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친 뒤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까지 통과하면 적용된다. /뉴스1

"치유·재활 핵심 거점 지원"

민주 이원택 의원, 국립청소년상담센터 익산 유치 환영
국회 여가위원 활동하며 유치에 전방위 노력 기울여

"익산이 청소년 치유와 재활을 위한 호남·충청권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 위기 청소년들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국립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의 익산 유치가 지난 12일 확정된 가운데, 전북 유일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부터 '국립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익산 유치를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익산이 호남과 충청 지역 청소년들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핵심 거점 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립청소년상담센터(호남권) 건립 및 익산 유치를 추진해왔다. 전북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행동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남권청소년상담센터(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의 익산 유치가 지난 12일 확정된 가운데, 전북 유일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부터 '국립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익산 유치를 위해 관련 예산의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익산이 호남과 충청 지역 청소년들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핵심 거점 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립청소년상담센터(호남권) 건립 및 익산 유치를 추진해왔다. 전북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행동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

서만 운영되고 있어 호남권·충청권의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익산시와 함께 여성

가족부 장관·차관 등에게 호남권에 국립청소년상담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등을 끈질기게 설득, 국립청소년상담센터(호남권) 설립을 위한 실시계획용역비 8.75억원(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기도 했다.

또한 여가부 공모 과정에서도 익산이 국립청소년상담센터 유치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용역 및 전북도에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며 오랜 기간 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해왔던 점과 호남과 충청을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강점 등이 있음을 여가부에 적극 설득하는 등 국립청소년상담센터(호남권)의 익산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부터 호남권 국립청소년상담센터를 익산에 설립하고자 노력해왔는데, 이제서야 익산 유치가 확정되어 누구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국립청소년상담센터(호남권) 익산 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한병도·김수홍 의원님과 정현을 익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저 역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호남권 국립청소년상담센터 설립이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권요안 도의원, 완주 생강 전통농법 활성화 간담회

전북도의회 권요안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완주 봉동 생강굴 및 토종생강 생산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의원은 "향후 전통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는 완주 토종생강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확산하기 위한 전시·체험관 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전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북도청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기자

이날 간담회를 통해 권 의원은 "현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